

## 전국민연금시대의 정착을 위하여



車興奉

보건복지부 장관

**우**

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지난 4월 도시지역 가입자들에게 확대 적용함으로써 전국민연금시대를 열게 되었다. 1988년 제도가 실시된 지 불과 11년만에 생업에 종사하는 모든 국민을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로 포괄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IMF 사태를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 사는 자영사업자, 영세상인, 영세사업장 및 일용근로자들에게 제도를 적용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엄청난 고령화 속도에 있다. 내년에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7%를 넘어서는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게 되며, 2030년경에는 인구 5천만명 중 1천만명이 노인이 되는 ‘고령사회(aged society)’의 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고령사회가 위기로 인식되는 것은 은퇴후의 생활이 과거와 같이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전통을 유지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있다. 지금 30대의 청·장년이 노인이 되는 장래에는 대부분 스스로 노후를 맞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젊었을 때에 국민연금에 미리 가입함으로써 불확실한 장래의 노후생활을 준비

연금제도는 우리 사회 공동체가 서로에 대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와 나눔을 실천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현대 사회가 낳은 이기주의와 물질주의 가운데에서도 사회적 연대에 의해 서로 돕는 현대사회의 효자(孝子)라고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을 예견하면서도 현재 사정이 어렵다고 우물쭈물한다면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안전불감증'에 빠져 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더구나 국민연금법은 1973년에 제정되었으나 IMF 사태와 유사한 경제난으로 몇 차례 연기된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법 제정 이후 15년이 지난 뒤에야 도입된 만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연금제도의 혜택을 나누기 위하여 10여 년에 걸친 짧은 기간에 전국민연금화를 달성하려는 어려운 정책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급속히 제도를 확대하다보니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최근 도시지역 가입자 확대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전국민연금시대를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거치지 않을 수 없는 장애요인들이며,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 선진국의 연금제도가 정착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듯이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전국민연금시대를 출범시키는 지금, 국민연금의 참 뜻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새겨 보자. 연금제도란 노후에 더 이상 소득할

등을 할 수 없거나, 한 가정의 가장이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되어 버리거나 사망함으로써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생계보장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연금제도란 우리의 아름다운 상부상조의 전통과 노인부양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부활시키는 중요한 뜻을 담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 공동체가 서로에 대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와 나눔을 실천하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그리고 현대 사회가 낳은 이기주의와 물질주의 가운데에서도 사회적 연대에 의해 서로 돕는 현대사회의 효자(孝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좀 더 부담하는 것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부담의 짐을 덜어주는 나눔의 정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전국민연금시대를 여는 마지막 고비에서 위기와 기회를 함께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이 필요로 하고, 납득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